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체제 개편과 운영방안’ 워크숍 개최

대한전기협회 주최, 한전, 발전회사 등 300여명 참석

대한전기협회는 6월 24일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기흥골드 웨미리콘도에서 ‘제2회 전기사업법 기술기준 체제 개편과 운영방안’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한국전력공사, 발전회사, 전기안전공사, 민간전기업체 등 전력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해 최근 기술기준의 개편방향에 대한 설명과 검사제도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발표를 들었다.

▲ 기술기준 국제화 경위

(대한전기협회 김광덕 팀장)

정부는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술기준을

산업자원부 고시로 운영 중이다. 전기설비 기술기준은 발전소에서 전기사용 장소까지의 원동력 설비를 제외한 전기설비 시설기준을 정한 것이며, 발전소의 원동력 관계 기술기준으로서 발전용 화력설비기술기준과 발전용 수력설비기술기준이 있다.

또한 발전설비의 용접부에 관한 용접 및 시험방법 등을 규정한 발전설비 용접설비기술기준이 있다. 이와함께 발전용 동력설비기술기준은 현재 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WTO 협정의 의무 이행을 위해 기술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의 기술기준은 KS에 기초해 운영되고 있으나, WTO

협정은 국제표준을 기술규제의 기초로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민간자율조정기구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기술기준 국제화 전담관리기관으로 대한전기 협회를 선정해 현행 기술기준의 제·개정 등 유지관리업무와 기술기준의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개편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기술자문이나 기술기준 관련 조사·연구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02년 4월까지 추진된 국제화 1차년도에는 기술기준 전담관리조직과 체제를 구축하는 활동을 벌여 왔다.

당시 추진기구인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가 설립돼 기술기준 체제 개편방향을 설정하고 기술기준 개선 조사연구 및 자문활동을 전개해 왔다.

2002년 5월부터 2003년 4월까지 1년동안 진행된 2차년도에는 기술기준 개편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해 관련 협단체와 한국전기기술기준위원회의 검토·심의 과정이 있었다.

올 5월까지 진행된 3차년도에서는 기술기준 개편(안) 작성이 진행됐으며 올 6월부터 시작된 4차년도에서는 신 기술기준을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기술기준 개편안은 국제표준과 부합된 국가표준을 우선 도입하고 KS가 제정돼 있지 않거나 국제표준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국제표준 또는 민간표준을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전기설비기술기준 개편체제 및 향후 계획

(숭실대학교 김재철 교수)

전기설비 설치자는 그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판단기준에 의해 시설하면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술기준에 비추어 안전성과 충분한 기술적 근거가 있는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기술기준의 판단기준에는 재료의 규격과 수치, 계산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판단기준은 기술기준의 성능규정을 충족시키는 구체적인 기술적 요건 중 하나의 예이며, 기술기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부는 아니다. 판단기준에 없더라도 그것이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면 정부는 그 기술적 근거의 타당성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앞으로의 기술기준 국제화 추진 과제로는 △감전보호·접지에 관한 사항 △IEC60364 적용에 따른 각종 설계·시험 데이터 검토 △전압의 구분 △지지를 설계에 적용할 품압하중 △기타 전선·배전관련 규정에 관한 기술적 가이드 등이다.

국내외 민간규격의 검토와 도입도 필요하다.

▲ 화력 원자력발전 기술기준 체제개편 및 향후 계획

(화력·원자력 분과위원장 김옥대)

화력설비 기술기준은 지난 74년 1월9일 상공부령 제412호로 최초 제정 고시됐다.

기술기준은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미국은 개별 산업분야별로 90%가 민간규격인 분산형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또 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정부자금을 지원받는 유럽은 중앙집중형 모델이며, 일본은 관민 합동형, 계획경제국가나 개발도상국은 정부주도형이다.

현재 화력설비기술기준의 구조는 일본 기술기준을 모방해 절대기준으로 작성돼 있다.

정부는 이같은 기술기준을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법규로서의 기술기준은 간소화·국제화하고 보완조치로서 민간표준 및 국제표준을 활용토록 했다.

또한 민간표준의 활용과 자율책임 강화로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토록 했다. 기술기준의 개선과 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 운영 중이다.



중국전력기업연합회, 대한전기협회 방문

양 협회간 상호교류 및 관심사 논의

중국전력기업연합회 임원 및 실무자 8명이 6월 29일 대한전기협회를 방문해 양협회의 상호교류 및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했다.

이날 백영기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이 수교 이래 엄청난 규모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에너지 및 전력 분야에서도 교류가 더욱 많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중·일 등 동북아의 에너지 협조체제가 정부간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민간차원의 교류로 뒷받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양 협회간 실무교류 협의회의 개설을 희망한다"고 피력했다.

이어서 중국전력기업연합회 방문단장인 왕영간 비서관은 "중국전력기업연합회는 에너지기업들이 조직한 연합회로서

1,000명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방대한 조직이며, 200여명의 이사와 80여명의 상무이사, 130여명의 부회장급 임원들이 있다"면서 "석탄, 석유, 원자력, 전기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협회와 성격이 거의 비슷한 단체로 전기협회의 의견에 적극 찬성하며 성사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전력기업연합회는 1988년 국무원의 승인으로 설립된 비영리 사회경제단체로서 전 중국의 에너지 관련 회사들과 관련 협회를 연합하여 조직된 기구로 설립이후 11년간 정부 부처와 각종 단체회원의 지원하에 산업의 구조개편 및 개선 건의와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등 많은 업적이 있는 협회이다.